

대화·대안 없는 ‘강대강’ 대치 한달… “환자는 울고 싶다”

정부,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의사단체 ‘반대’
전공의, 의대정원 반대에 집단 사직...의협은 총궐기 대회
정부 “변호사도 회계사도 정원 문제로 협상한 사례 없어”



지난달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날 빅5 병원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공의의 집단 사직은 전국으로 확산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은 정부가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6일 정부는 10년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밝힌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하고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뒤 의협 대의위원회는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의논했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정부와 의사단체는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았고, 상황은 강대강 대결로 흘러갔다. 지난달 15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20일 이후로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에 거듭 경고를 보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의료법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빅5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전공의 사직은 전국으로 번졌고, 이날 14일 기준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1만 2910명 중 92.9%인 1만 1999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그쳤다.

지난 3일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총궐기대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의 필수요로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는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전공의 현장 이탈은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촉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유교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8개교, 771명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대학 20곳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의료계 집단 행동 시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다.

의협과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는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은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받고 있다. 의사 총궐기대회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의협과 이틀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양 측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세 번째 경찰 소환조사에 앞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교수님들도 전공의들과 뜻이 같을 것”이라며 “교수 집단사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지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사이 피해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삼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출구 못찾으면 결국 국민 피해”...전문가들 제언 ‘이것’

소모적 논쟁 멈추고 합리적 중재안 마련을
의료체계 개선 없인 의대증원 취지 못살려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증원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합리적인 중재안 마련에 나설 때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없이 극한까지 몰고 가는 치킨게임은 사태 이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해온 의료체제로 돌아가는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전공의, 의대생, 개원가, 대학교수 등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의료계 내에서도 정부를 향한 의정 협상의 전제 조건인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의 대화협의체 구성” 등으로 달라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개 국립대 의대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협의회(거국협) 김정구 부산대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구 부산대 회장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어떤 조건을 전제로 대화하려 하면 양측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에도 변화가 생겨야 전공의들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출국금지, 범정 최고령, 면허정지 처분 등의 조치가 MZ 세대인 전공의들의 반발을 더 키우고 있어 감압이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요리를 살리려던 의료소송 부담을 낮추고 수가 정상화를 통한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필수요리 강화라는 의대증원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장은 “수가가 지금보다 5배 정도 높아져야 한다”면서 “인상된 수가는 의사 1인당 받는 돈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추가 인력 고용 등 시스템 확충에 주로 투입돼 결국 환자의 안전이 강화되고 국

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외과 전문의는 “과거 전공의들은 중환자를 살리는데 자부심과 희열 때문에 힘들고 돈을 못 벌어도 필수요리를 지원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걸맞지 않은 형사 소송을 당하고 10억대의 거액 배상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기피과가 됐다. 진료 중 경과실, 무과실,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없애려면 의사들이 전공의 때 필수진료과에서 수련받은 후에도 해당 진료과 전문의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실제 의사로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필수요리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표적인 기피과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 피부·미용 등 다른 진료과목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3년간 배출한 장기화로 15세 미만 소아는 350만 명이 줄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5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건 의사는 적다. 소아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환자가 어린이여서 진찰 외에 추가

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와 시술이 거의 없는 데다 어린이는 기대어명이 길어 손해배상금이 수억 원에 달해사다.

환자나 구급대원이 1339로 전화를 걸면 공중보건교사가 환자를 경중·응급환자로 신속히 분류해주는 방안도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으로 거론된다.

오는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과거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료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주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